

재벌경제의 위기와 처방

1997년 한국경제의 주된 이슈는 기업부도 사태로 상징되는 경기침체 문제일 것이다. 연초부터 한보 부도에 이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해태 등으로 이어져 온 기업부도 사태 등 한국경제는 위기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임휘철

성균관대 강사, 경제학

기업부도와 금융불안

1997년 한국경제의 주된 이슈는 기업부도 사태로 상징되는 경기침체 문제일 것이다. 연초부터 한보 부도에 이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해태 등으로 이어져 온 기업부도 사태 등 한국경제는 위기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재벌계 기업들의 부도사태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약화되어 통화공급상의 애로가 크지 않고 시중에도 적지 않은 유동성이 공급된 상

태임에도 신용빚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현저히 증폭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화자금의 조달이 곤란에 부딪혀 있고 종금사들은 자금돌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기업으로 나간 자금을 회수하기에 여념이 없고 일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은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하루하루 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때맞추어 동남아지역의 금융위기까지 겹쳐 원화도 상승하여(원화의 평가절하) 기업의 환차손 부담이 커지는 한편 국제적 투기자금의 환투기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금융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한국과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으나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성장활력의 약화, 기업부도 사태의 속출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 불안정의 심화 등 외전상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과거 멕시코나 최근의 태국이 겪고 있는 외환위기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변동의 특징

거슬러 보면 한국경제는 1980년대 후반의 대규모 흑자를 수반한 고성장을 마지막으로 1990년대 들어서는 성장의 활력이 한 단계 낮아져 기업의 체신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경기순환상으로는 1993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들어서 1995년까지는 비록 제조업내 양극화(활황 시기에조차 중화학공업의 호조와 경공업의 장기침체가 공존함) 현상이 지속되긴 하였으나 중화학공업의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경기가 하강기로 접어들어 최근까지 2년여간 하강국면이 지속되어 왔다.

물론 지난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부문별로 철저한 차별화가 특징적이다. 부문별 차별화란 잘 되는 부문은 잘 되고 안되는 부문은 더 안되는, 즉 중화학공업의 양호한 성장과 경공업부문의 정체 그리고 수출대기업의 호실적과 내수 중소기업의 곤란이 중첩된 이른바 '경기양극화'를 말한다. 따라서 지수상 경기회복의 폭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경기는 그 만큼 좋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는 1995년 말부터 급속히 후퇴해 왔다. 한국경제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기변동 과정에서 수출과 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설비투자의 경우 1995년 하반기 이래 둔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1996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급기야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서 경기침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수출 역시 1996년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제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그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일정한 수입수요(투자 및 소비) 속에 수출둔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매월 증가하여 올해 1월에는 월별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해 경제위기감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와 더불어 기업부도 사태가 최근까지 연이어 발생하였다. 생산증가세의 현저한 둔화, 재고의 누적, 설비투자의 둔화 그리고 신용빚박에 따른 기업부도 등 경기의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연초에는 1992년의 멕시코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태국사태의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다.

지리한 침체 속에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기업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신용빚박은 더욱 가중되는 등 위기감이 증폭되어

왔는데, 이러한 과정은 평균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부문이나 기업을 자본의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인위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한 조정과정으로써 효율을 제고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폭력적인 파괴과정을 통해 자본의 효율에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살아남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향한 기반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며 지리한 암흑을 빠져 나와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그리고 불황에서 호황으로 교체되는 순환적 경기변동이란 이러한 과정에 상응한 것으로써 일종의 경험법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심도 깊은 위기 징후들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은 지표상으로도 확인된다. 예컨대 재고증가율의 경우 경기가 호황의 정점을 지나 활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경기가 저점에 임박하면서 생산둔화와 더불어 그 증가율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수출둔화로 재고증가율은 20%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10%수준으로 낮아져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회복세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제의 경우 수출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2/4분기를 거치면

서 현저히 둔화되어 왔던 수출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향후 경기회복의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물측면에서는 경기저점 통과가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수출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 기업 도산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경기회복세를 가로막는 힘도 강해 향후의 경기회복과정이 매우 완만한 모양새로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위기와 구조적 모순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주로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의거한 것이며 경기순환이라는 경험적 결과들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1993년과 1994년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양극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작금의 경기회복 가능성 역시 반도체나 컴퓨터, 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회복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예컨대 수출 주력제품의 경우 조금만 따지고 들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문제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수출회복 가능성 자체가 무엇보다 국제가격의 회복 가능성이나 엔화시세 등 국제가격변수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난날 한국 경제의 활력은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에서 구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수출과 투자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주도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 후반 3차 호황기를 거치면서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3차 호황기에는 전산업·전업종에 걸쳐 무차별적인 '소나기' 식 수출이 가능했다면 이후로는 주도산업의 변화가 뚜렷하다. 섬유·의복, 신발 등의 경공업이 조악한 반면 반도체와 컴퓨터를 주로 한 전기전자, 화학, 철강, 자동차 등이 주도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수출 확대와 전면적인 대외개방) 조류의 영향이고 대내적으로는 곧 각종 비용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산업구조조정(구조조정)의 배경이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금융구조의 후진성 문제도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데 위기전단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점과 관련된다.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경기양극화' 문제이다. 해외시장의 환경변화나 각종 비용조건의 변화(위기의 원인론으로 제시된 이른바 '고')로 섬유·의복이나 신발과 같은 전통적 수출업종의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해

졌다. 이를 말해 주듯 1990년대 들어 경공업부분은 경기의 상승국면(GDP성장률 10%수준)에서도 4~5%의 성장률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 마이너스성장의 늪에 빠져 왔다. 한편 전통적으로 보호된 내수시장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 역시 개방의 파고 속에 건디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산업화, 합리화, 기술개발, 한계부분의 정리와 해외진출 등 산업구조의 조정을 줄곧 부르짖어 왔는데, 정책 자체가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나 그 추진과정은 그다지 성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1980년대 후반 3차 호황기의 대량수출 =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 기업들은 아무래도 구조조정 보다는 눈앞의 이익 쟁기에 급급하였을 것이고 이 호황이 마무리된 다음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의 리딩산업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정보화), 전면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커지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그리고 불황에서 호황으로 교체되는 순환적 경기변동이란 이러한 과정에 상응한 것으로서 일종의 강행법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 산업구조 조정 성과의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상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서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화와 상용한 범용제품에서만 상당한 성과를 올렸을 뿐, 중국을 포함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상당수 제품시장을 그들에게 내주게 되었다(섬유의복, 신발 등은 물론 가전제품 등 내수소비재 부문에서의 한국의 후퇴가 현저함). 더구나 경제규모가 일정하게 커지면서 선진각국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등 경제력 증대에 상응한 대응이 충분치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일정한 대기(통상마찰 하에 대선진국 수출정제)를 치르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경제의 정보화 또는 경제의 소프트화 경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한 국내 생산기반의 결여로 내수시장을 수입품에 잠식당하는 한편 대기업은 고가소비재 수입에 앞장서 소비의 고급화 경향을 부추겨 왔다.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만 아니라 유통부문에서도 외국기업이 밀어닥쳐 국내시장을 유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 내수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활동영역이 잠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부문에서 사업업자들의 곤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벌경제의 반(反)역사성

구조적 에로는 특히 재벌이라는 한국경제의 '독재자'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중간 특혜 속에

서 성장한 재벌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주요 명맥을 틀어쥔 채 주요 경제주체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국가가 반민주성 문제로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세계적 조류로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는 추세에 있고 생산대중 역시 1980년대 후반이래 지속된 임금상승이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라는 공세로 그 힘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재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는 기현상이 연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재벌기업들은 지난 3지호황기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잉여자금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자원과 자금의 배분을 매개로 정부에 크게 의존해 왔던 데서 한층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민주화과정에 상응하여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권적 개입력이 후퇴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듯한 위용까지 갖게 되었다. 적어도 한국정부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국가로서 평가받지 못하는 반면 재벌에 속하는 일부기업들은 세계기업의 명단에 오르내릴 만큼(예컨대 포춘 500대기업으로 거명되는 한국기업들의 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벌의 총수 등이 각종 세계 자원의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라) 자본의 위용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국의 재벌이 자본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어 가는 만큼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나 효율성 관점에서도 정부의 관료조작에 비해 한 걸음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정은 무엇 보다 과거 성장연

대를 통해 재벌기업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결과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재벌기업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어느 나라 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제 이 경제독재자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 보이는 것이 걱정인 현실이다.

30대 재벌의 제조업내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지난 1995년 41%로 지난 1985년의 22% 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30대 재벌의 출하액 점유율 역시 지난 1994년 약 40%로 높다. 특히 30대 재벌 가운데서도 상위 4대 재벌의 집중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전산업에 걸친 '분야별식 경영'에 의거한 것인데, 하청관계를 통해 중소자본을 하위의 생산시스템을 통괄하는 생산방식에 의해 수직상의 지배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선정이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결과적으로 30대 재벌에 속하는 계열회사 수를 더욱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30대 재벌의 계열회사 수는 1993년 604개사에서 1996년 669개사로 그리고 1997년에는 819개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융개혁 논의 역시 재벌에게 은행의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거나 적어도 경영권 개입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여 재벌의 금융지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이리하여 재벌의 수축이 절되면 국민들의 피부직경기가 그리 좋지 않더라도 경기는 활황세를 보이게 되고 반대일 경우

에는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압박이 가중되는 식이다.

문제시되고 있는 경쟁력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곧 재벌의 경쟁력과 동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위기는 곧 '재벌공화국의 위기'로 통한다.

더구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로 상징되는 재

벌의 경제 지배력에는 불합리성 또는 비효율성이 여전히 온존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선진국 진입 운운하는 단계로까지 그리고 세계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소유구조는 개인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과 관계인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지분분포를 보면 평균 44.1%(동일인 4.8%, 특수관계인 5.5%, 계열회사 및 자기주식 33.8%등)가 특정한 개인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을 만큼 소유집중이 심각하다. 따라서 여전히 기업문화의 자본주의

재벌기업들은 지난 3차호황기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잉여자금을 구축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민주화과정에서 상용하여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권적 개입력이 후퇴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듯한 위용까지 갖게 되었다.

적 합리성에의 접근정도는 무엇보다 대주주 개인의 태도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문어발식 전방위 경영의 결과 오늘날 제벌은 소망스러운 산업구조 조정과 단기적 이윤획득 사이에서 표류하는 듯이 보이는데, 최근의 경제환경 악화와 더불어 구조조정은 뒷전인 반면 단기적 이윤획득에 골몰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실금융문제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금융산업이 가장 후진적인 부문으로 내몰리게 된 것도 재벌 중심의 고정장체제 때문임은 물론이다. 지난날 개발연대에 즐겨 사용된 개발지원 금융체제, 이른바 '관치금융'이 곧 그것이다.

금융기관은 개발과정에 앞장선 재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제가 위기 처할 때마다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었고 최근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수혈 없이는 유지가 곤란한 화산 직전의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연초의 한보(97.1)에 이어 삼미(97.3), 진로(97.4), 대농(97.5), 기아(97.7) 등으로 이어지는 기업부도 사태로 금융권이 추가로 떠안게 된 부실대출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로

작금에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경제적 위기 현상에 대하여 단

기적 정책 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구조적 애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 주체도 그리고 그 대상도 재벌기업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현정부 후기에 들어 강화되어 온 자유화조치로 또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집권초기에 제기되었던 일련의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후퇴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경제침체를 빌미로 주로 비용조건의 삭감에서 위기처방을 구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경쟁력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의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나 보다 멀리 보면 결코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발전에 상응한 효율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은 재벌 내부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혁신에 상응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생산기반이 되고 있는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재벌중심의 기업조직은 부정적이다.

불론 재벌의 기술력 역시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나 전문성 없는 문어발식 경영에만 의존해서는 오늘날 신기술혁신의 국제경쟁 시대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투자와 기술개발의 단위 규모가 거대화 되는 추세에서 대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

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갑화심식 경영의 해체와 1인 지배의 족벌체제 해체 그리고 대기업의 전문화 나아가 이를 지명해 줄 수 있는 자생력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중위기술과 상대적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국제시장에서의 '품바 구니 경쟁력'에서 벗어나 기술개발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화와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율적 활성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적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정부의 몫도 중요하다.

아직도 대외개방과 국제경쟁의 격화에 대응해 대기업 스스로 전문화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또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개방의 파고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을 언제나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나 노동의 합리화에서 구하는 무모함이 반복될 뿐이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의 정착과 강화, 소득분배의 지속적인 개선, 재벌의 경제적 집중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기업경영의 민주화 등 일련의 경제민주화 과제란 결코 자본의 가치중시이나 이윤획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자본주의 발전과 계를 같이하는 것, 아니 그것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두고자 한다.

임금상승과 소득분배의 개선은 건실한 내수시장 확대로 통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대외의존성을 완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통과점이라는 사실,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 역시 무엇보다 자본주의 발전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 신기술혁신과 대량생산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함에 있어 재벌체제의 조정(족벌체제의 해체와 전문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란 어느 것 할 것 없이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구조조

정의 한계와 지체가 경쟁력 약화의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구조조정이 임금삭감 등 생산요소비용의 절감을 통한 저난년의 '남은' 경쟁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외의 비용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반의 구축과 경제민주화를 속으로 한 구조개혁을 통해 문민정부가 제기했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경제, 즉 '신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

경제심체를 뿌리로 주로 비용 조건의 삭감에서 위기처방을 구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경쟁력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심체의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나 보다 멀리 보면 결코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